

미디어와 세상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키우기

소프트웨어학과 김경민

목차

01	사건 개요 & 문제 제기	05	권리·윤리 쟁점
02	24 시간 확산 타임라인	06	디지털 시민성 실천 방안
03	팩트 vs 재현(교차검증)	07	결론 & 실천
04	언론 프레임 & 교차검 증		

사건개요

“240번 버스” 왜 하루 만에 전국을 달궜나?

머니투데이 [구독](#)

[단독]"4살 아이만 내렸다"...'240번 버스'에 들끓는 분노

입력 2017.09.12. 오후 12:21 · 수정 2017.09.13. 오전 11:17 · 기사원문

김경환 기자

9,939 16,040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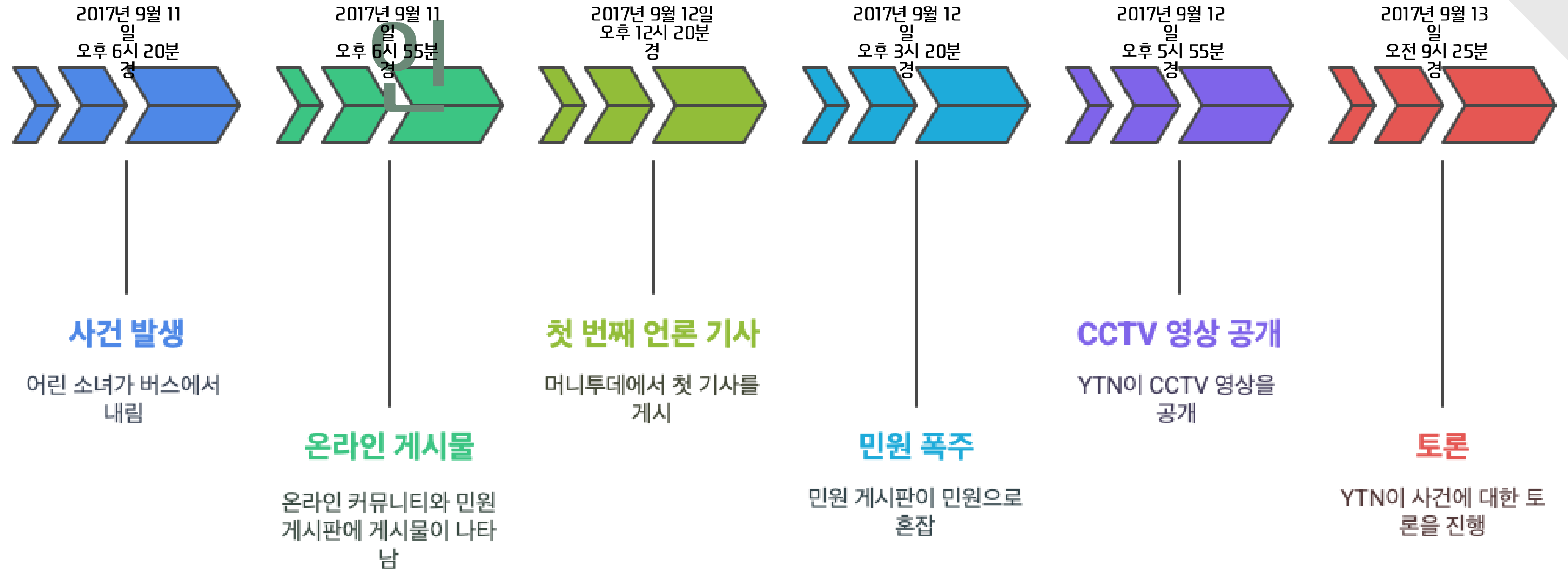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경환 기자] [(상보)못 내린 엄마 절규에도 그냥 가버려... 경찰 "아이는 찾았다", 서울시 "정차 어려운 상황, 재발방지 조치"]



4살 아이와 버스에서 내리려던 엄마가 아이가 먼저 내리고 본인이 하차하려는 찰나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24 시간 확산 타임라인



언론기사 :
<https://news.naver.com/main/article/008/0003933707?sid=102>
https://news.sbs.co.kr/news/viewPage.do?news_id=N1004390611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10694.html

앵커-인터뷰 :
https://www.ytn.co.kr/_ent/101/121837087341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

팩트 vs 재현

4세 아이의 초기 주장

초기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7세 아이의 자발적 하차

CCTV로 확인된 사실과 일치하는 주장.



욕설 미확인

초기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문 닫히고 10초 후 얼마 인지

CCTV로 확인되었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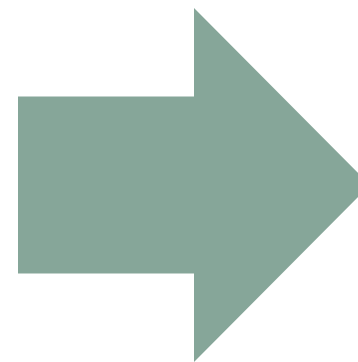
욕설 확인 :

https://www.mhj21.com/sub_read.html?uid=109235&ion=section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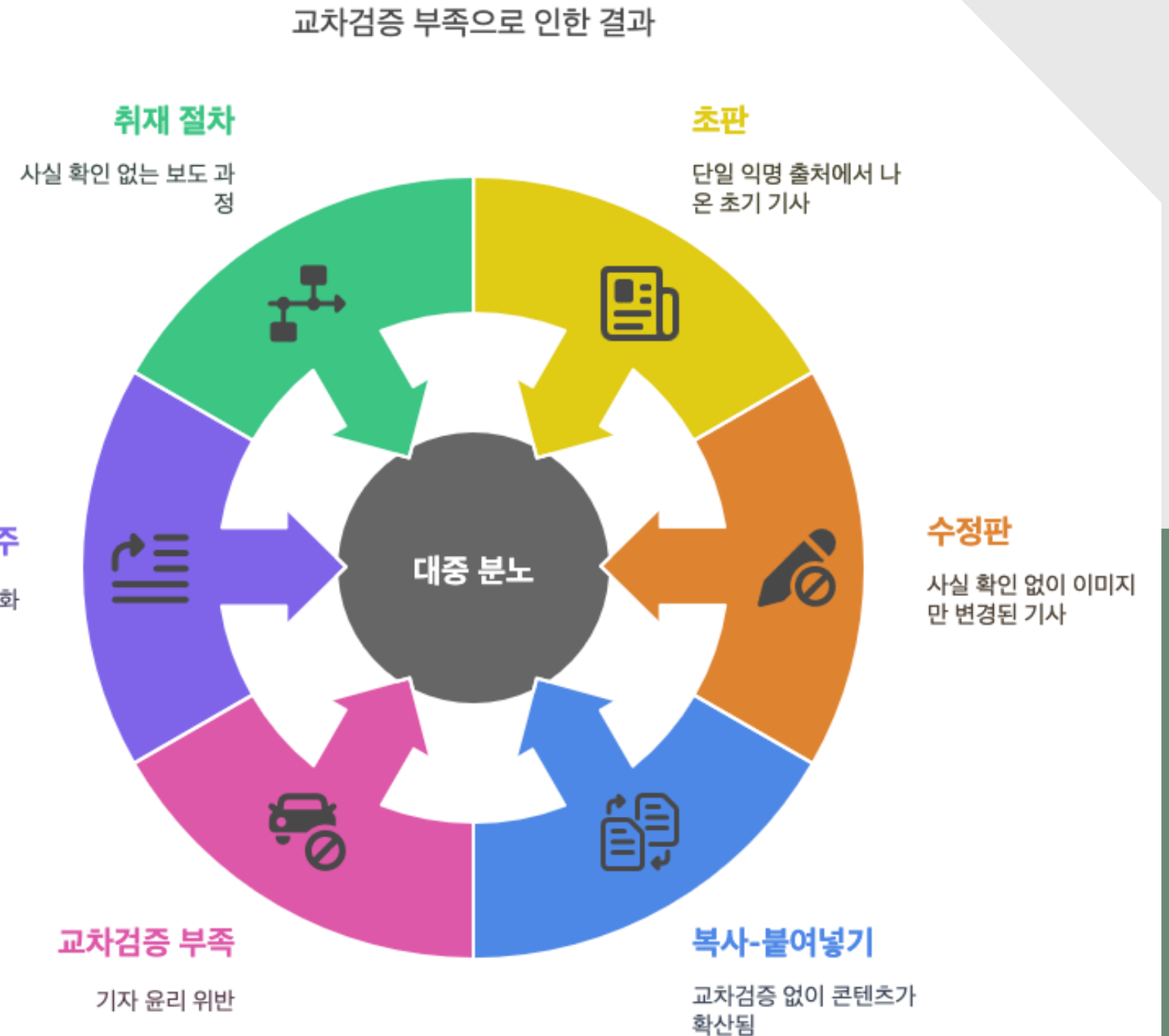
내부 CCTV :

https://www.youtube.com/watch?v=5teo_lef8lc&t=79s

언론 프레임 & 교차검



헤드라인 변주
기사 제목의 변화



버스기사를 향한 마녀사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095091?sid=102>
<https://sports.hankooki.com/lineup/article/view.html?idxno=621368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098888?sid=102>

권리 · 윤리쟁

1

프라이버시 권리

프라이버시 권리는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윤리적 고려 사항이다.

점



3

명예훼손 법률

명예훼손 법률은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고려 사항이다.



2

사실 확인 의무

사실 확인 의무는 공공 책임을 위한 윤리적 고려 사항이다.



4

온라인 명예권 보장

온라인 명예권 보장은 공공 책임을 위한 법적 고려 사항이다.



법조문	구성 요건	처벌 내용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5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9조(출판물등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제307조제2항 죄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 제2항(직계존속 협박)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비방)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명예 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비방)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명예 훼손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10875.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07%EC%A1%>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EC%A0%9C70%EC%A1%B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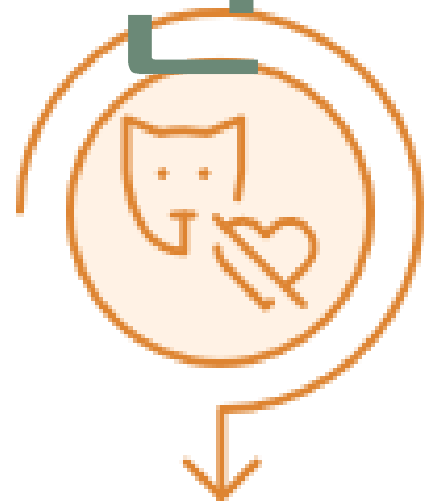
디지털 시민성 실천 방

안



교차검증

게시글, 언론, 공식 발표
및 원본 영상을 비교하
고 최소 2개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확인하기



감정적 프레이밍 인식

자극적인 표현에 휘둘리
지 않고 어휘의 의도를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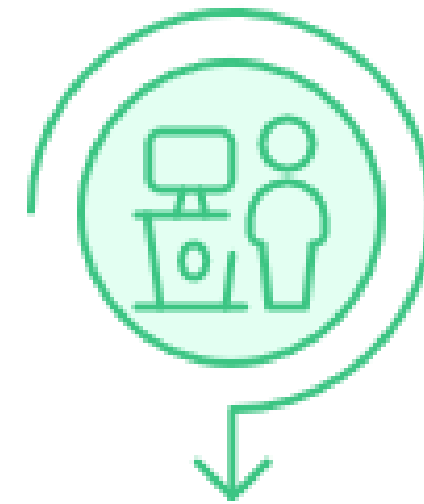
사실 기반 공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확산하지 말고 출처를
명시하고 허위 사실은
즉시 정정하기



권리 존중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보
호하고 악성 댓글을 자
제하여 2차 피해를 방지
하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기적으로 워크숍과 세
미나에 참석하고 팩트체
크 도구 사용법을 배우
기

결론 & 실

천



속도 경쟁의 함정

보도 첫 1시간에 집중된 기사 생산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생략되면,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초기 보도로 인해 네티즌 여론이 과도하게 형성되면, 이후 정정·삭제에도 대중의 기억 속에는 '첫인상'이 남는다.

허위정보의 치명적 파장

한 번 유포된 허위사실이 개인의 명예·정신건강·직업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240번 버스 기사는 '마녀사냥'으로 인해 일상 회복에 수개월이 걸렸으며, 심리적 트라우마가 지속되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첫 번째 반응보다 두 번째 검증이 중요하다.
한 번 더: 게시판 글 → CCTV 영상 → 공식 입장 순으로 사실관계 확인

2. 나부터 '멈춤' 습관
클릭 전, 스스로 "이 정보가 과연 사실인가?" 자문하기
의심이 들면 '공유' 버튼 대신 '검색'·'교차확인'

3. 상호 존중의 온라인 예절
상대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기본 전제
비난·조롱 대신 질문·대화로 소통하기

감사합니

다